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김근식(경남대학교)

논문 요약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 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분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반미 자주와 반미 통일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대등한 한미관계의 진보적 가치가 동시에 북한 근대화와 우호적 한미관계라는 보수적 가치와 공존하고 양립하고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엇박자를 교정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을 단절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해법이다.

주제어 : 민족주의, 남남갈등, 남북관계, 한미관계

I. 문제의 제기

탈냉전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 보수간 갈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남남갈등은¹⁾ 냉전 시대 남북의 적대관계와 한미의 혈맹관계가 전혀 의심받지 않고 수용되었던 것과 달리 냉전 종식 이후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화해의 증진과 한미관계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면서 비롯되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집약되는 남남갈등의 쟁점은 결국 동포애를 강조하고 화해협력 기조를 정당화하는 진보진영의 입장과 적대관계 온존을 강조하고 강경압박 기조를 정당화하는 보수 진영의 입장으로 크게 대립된다.²⁾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대립 구도는 그대로 대미관과 대미정책에 이어진다.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앞세운 진보는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대북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보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글로벌 차원의 질적 발전을 강조한다. 남남갈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창 앞에서의 보수 진보 진영의 각 집회가 한쪽에서 김일성 화형식과 대형 성조기를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한반도기를 펼치는 모습은 바로 우리 남남갈등의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대북 대미 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남남갈등은 실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각각 갈등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자주 지향의 대미정책과 정책 패키지를 형성했고 반대로 동맹 강조의 대미정책은 실제에서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과

1) 이에 대해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참조.

2)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p. 364.

친화적이었다.

탈냉전 이후 적대적 남북관계가 화해적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적 교류가 증대되는 한편으로 그에 비례해서 한미관계는 갈등이 늘어나고 쟁점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미관계가 주한미군 감축,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환수와 전략적 유연성,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쟁점으로 다소 소란스러웠던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³⁾ 즉 냉전 시대의 남북 적대관계와 쌍생아였던 한미 동맹 관계는 탈냉전 이후 남북 화해와 함께 한미 관계의 재조정으로 새로운 대상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적대와 갈등이 증폭된 정도에 비례해서 실제로 한미관계는 21세기 전략동맹을 운위하면서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을 자랑하고 있다.⁴⁾

민족화해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길항관계의 모습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 구조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탈냉전과 남북관계 개선 이후 한반도에서는 민족화해의 흐름과 한미동맹의 흐름이 일정한 길항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화해협력의 대북정책과 균형적 한미관계, 그리고 강경기조의 대북정책과 동맹 강화의 한미관계가 정책적 동반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이 양립 불가능한 관계이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항상 엇박자를 낸다면 한국의 대외전략은 당분간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또한 더욱 악화되기 쉬울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북, 대미 정책이 상호 병행 가능한, 그리하여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상호 선순환하는 이념적 교집합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일은 지금 시기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와 보수가 공히 동의하고

3) 이수훈 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4) 김주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민족주의의 거세와 공세적 국가주의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78호, 2010 참조.

이해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가 정리된다면 지금의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대북·대미 정책의 상충관계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생산적 시도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길항성(拮抗性),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상호교환 관계라는 탈냉전 이후의 경향성에 유의하면서 본고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선순환 그리고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일관성을 가능케 하는 바람직한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21세기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족주의를 재고찰하고 이에 입각해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모순성과 상충성을 극복할 수 있는 향후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⁵⁾ 민족주의는 매우 오래된 정치 이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서 진보와 보수 공히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기조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민족주의의 이중적 개념과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민족주의의 개념과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크게 대별하면 서구의 근대화 이후 국민국가의

5) 친미와 반미,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라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 갈등을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그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진상숙,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반미’를 통해 본 이념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 『동양정치사상사』, 10권 1호, 2011; 심상섭,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등. 또한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와 지속을 중심으로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정일준, “지구시대 한미관계와 한국민족주의: 성찰적 민족주의를 위하여.” 『역사교육』, 제29권, 2005; 김동성, “민족과 통일의 미래.” 『전략연구』, 제14권 3호, 2007 등. 하지만 본 연구는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남남갈등의 근원을 규명하고, 이것이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 사회의 상호 대립적 민족주의 담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균형의 시각에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우 시론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인식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과 함께 민족은 호명되었고 따라서 민족주의 역시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로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⁶⁾ 서구 근대화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민족주의를 정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래 전부터 혈통과 언어 종교 등의 종족으로서의 민족이 존재했고 민족주의 역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실재하는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지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근대 자본주의 이후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과 근대 이전부터 종족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주장은 이른바 민족에 대한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로 개념화할 수 있다.⁷⁾ 민족주의가 서구 근대화 과정의 국민 형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라는 주장과 근대 훨씬 이전부터 오래 동안 공고하게 형성된 민족에 바탕을 둔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라는 주장은 또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와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 혹은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⁸⁾ 민족과 민족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결국 민족주의를 일시적이고 유해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탈민족주의적 입장과 여전히 민족주의가 지속적이고 유용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민족주의 옹호 입장으로 연결된다.⁹⁾

그러나 현실은 두 입장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은 객관적 정의 요소와 주관적 정의 부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고, 민족주의 역시 근대화 산업화 이후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성장한 측면과 오래 전부터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실재하는 민족주의의 감정과 정서가 있

6)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5; 에릭 홉스봄 편저, 박지향 외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어네스트 겔너 지음, 최한우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서울: KUIS Press, 2009.
7) 장문석,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2011, pp. 25-35. 이는 국가의 정치적 원리에 입각한 ‘국민국’ (Staatsnation)과 종족의 문화적 원리에 입각한 ‘문화민족’(Kulturnation)이라는 구분과 유사하다.
8) 장문석, 위의 책, pp. 58-63.
9) 한국에서도 민족주의를 유해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좌파 세계주의 입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었음을 둘 다 부인하기 힘들다. 결국 민족과 민족주의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측면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중성이 곧 민족주의의 본질인 셈이다.

민족주의가 완전하게 허구에 기초한 상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만 간주되는 것은 유구한 공동체 형성과 언어 혈연 등의 공동체 생활의 존재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가 철저히 종족적 정체성에 기초한 원초적이고 생래적인 정서와 감정으로만 간주되는 것 역시 민족주의의 정치적 의미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성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근대화의 결과이자 근대적 프로젝트로서의 정치적 측면과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라는 종족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그 무엇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탈근대가 유행하고 세계화와 지구화가 확장되면서 이른바 탈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이 지배적임에도 여전히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유효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¹⁰⁾ 다문화주의의 상대성 존중과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뜰레랑스 역시 민족 정체성의 유지와 고양이라는 민족주의를 아예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¹¹⁾

다만 서구의 민족주의는 이중성을 본질로 하면서도 주관적 정의와 이데올로기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고¹²⁾ 그에 비해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객관적 정의가 지배적이고 종족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 성격이 오래 전부터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근대화의 해일’에 따른 정체성의 필요에 의해 민족주의가 발생된 측면이 강한 반면¹³⁾ 한국의 민족주의는

10) 이선민,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36.
11) 양승태, “뜰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최상용 엮음, 『민족주의, 평화, 중용』, 서울: 까치, 2007.
12) 서구가 근대화 이후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이후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됨은 분명 민족주의가 근대화의 반동적 프로젝트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13)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민족주의의 발생에 대해서는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2부를 참조.

근대국가 형성이 외세의 침략으로 좌절되고 연이은 일제 강점을 거쳐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특히 해방 이후 분단의 고착은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통일을 지상과제로 간주하는 통일 민족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와 함께 ‘국가민족’으로 형성된 유럽과 달리 근대 이전에 민족의 원형이 이미 형성된 ‘문화민족’의 성격과 일제 및 분단을 거치면서 저항민족의 성격과 분열된 국가민족의 성격이 배태되었다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¹⁴⁾

한국의 민족주의가 진보와 보수의 민족주의 공히 민족의 객관적 정의를 인정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인정하고 있음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다만 진보의 민족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와 민족화해의 통일 민족주의의 입장이 강한 반면, 보수의 민족주의는 근대화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보다 강조하면서 부국강병과 민족중흥의 정치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일관성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래 이중적 의미를 갖는 민족주의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성 즉 근대성의 국민국가 형성의 과제와 민족 통일국가 달성이라는 과제와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대국가 달성 즉 산업화 근대화라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의미의 공민적 민족주의를 한편으로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자주와 민족통일의 달성이라는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민족주의인 것이다.¹⁵⁾

14)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2002, p. 32.

15)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는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송건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박현채 정창렬 편, 『한국민족주의론 I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김동성, 『한국 민족주의 연구』, 서울: 오름, 1995. 참조.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로는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III. 대북정책과 민족주의 : 통일 민족주의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적 특성에서 민족의 객관적 정의와 종족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 측면과 민족의 주관적 정의와 공민적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즉 근대 민족국가와 민족자주 및 분단극복의 달성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이중적 추구 과정에서 지금 시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연원이 비롯된다.

즉 대북관과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른바 민족을 강조하는 측면은 탈냉전 이후 북을 같이 살아야 할 동포로서 규정하고 민족화해의 필요성과 전민족적 단합 및 분단극복을 통한 자주성 실현이라는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한다.¹⁶⁾ 반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으로서 북을 접근하고 대한민국적 가치의 확장과 전 한반도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완성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대북정책과 가깝게 된다. 민족주의의 이중적 두 측면이 각각 발현됨으로써 이른바 진보적(좌파) 민족주의와 보수적(우파) 민족주의의 대립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을 내세워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분단극복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복원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이와 달리 보수적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앞세운 국가주의 통일을 목표로 삼아 한민족이라는 화해와 협력의 정서적 접근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과 흡수 통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진보정권의 시기 동안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대북기조를 유지했던 반면, 보수정권 출범

까지, 1978;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16) 좌파 민족주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잘 정리한 최근의 것으로는 21세기민족주의포럼 엮음,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2011.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대한민국 주도의 북한 버릇고치기와 흡수통일 대망론에 따라 대북 강경과 압박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물론 대북포용정책도 북한 변화 유도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내막적으로는 의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실제로는 압박과 봉쇄에 치우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기도 하다.

기실 남남갈등의 핵심은 우파 입장에서 대북포용정책이 지나치게 민족중시 입장에 사로잡혀 대북 퍼주기과 북한 끌려 다니기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북한을 변화도 시키지 못한 채 ‘민족지상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반면에 좌파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대한민국 중심의 국가주의에 경도된 채 정작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결국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남남갈등은 사실상 원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적인 접근 없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자주적 통일 민족주의에만 올인하는 좌파 민족주의 편향과 대북압박과 흡수통일만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우파 민족주의 편향에 빠져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대북포용정책이 처음부터 북한의 변화 유도와 한국 중심의 결과적 흡수통일을 전략목표로 고려했음이나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이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민족주의의 두 가지 측면이 공히 진보, 보수의 대북정책에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민족주의 이중성에 토대한 대북정책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남남갈등을 유발할 원천적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이 이른바 ‘우리민족끼리’¹⁷⁾를 내세운 ‘민족지상주의’로 경도되고,

17) 2000년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문구 중 일부로서 이후 북한에 의해 민족공조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보수진영의 대북정책이 이른바 급변사태 임박론에 기초한 ‘흡수통일 지상주의’와 ‘대한민국 민족주의’로¹⁸⁾ 편향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지난 진보,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에 실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이러한 편향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대다수가 퍼주기 논란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안보 경시에 대한 우려였다.

2005년에 실시된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 부족’(26.4%), ‘과도한 대북지원’(26%), ‘정책 투명성 소홀’(22.4%), ‘안보문제 소홀’(13.3%), ‘한·미 동맹 소홀’(9.1%)로 답해졌다. 2006년 7월 문화일보와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정책의 방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8.4%와 44.5%로 나타났다.¹⁹⁾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북압박 일변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2년 6월에 실시된 통일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9.2%가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5.24 대북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던 특수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강압·봉쇄 일변도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하게 나타났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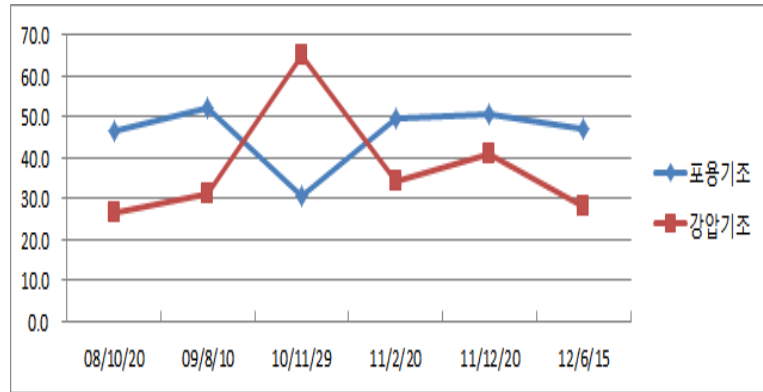
정착되었다.

18)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19) 통일연구원,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65~66.

20) 『뉴스스』, “MB정부, 대북정책 실패 60%,”(2012년 10월 24일자).

<그림 1>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여론 동향



출처 :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2008년 10월 20일, 2009년 8월 10일); 아산정책연구원(2010년 11월 29일, 2011년 12월 20일); 한국경제(2011년 2월 20일); 모노리서치(2012년 6월 15일).

민족주의의 근대성과 정치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당연히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고 근대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보장되어야만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그것은 당연히 북한 지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결국 근대성에 입각한 민족주의의 대북정책은 북한 근대화 즉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당연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통일의 달성으로 외세 개입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른다면 대북정책은 강경과 압박과 봉쇄가 아니라 교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다방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통일 민족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IV. 대미정책과 민족주의 : 저항 민족주의와 동맹 민족주의

민족주의 편향에 따른 진보 보수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다시 편향적인 대미정책과 결합된다. 민족화해에 경도된 대북정책은 당연히 반미자주리는 대미정책과 친화적이다. 민족지상주의에 의거해 북한을 민족화해와 자주적 통일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 미국은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배격해야 할 대상이 된다. 민족중심의 대북정책은 반미자주와 외세배격이라는 민족중심의 대미정책과 오버랩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에 편향된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한미동맹 강조의 대미정책과 결합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공민적 민족주의의 토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침 야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지극히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우선이라는 대미정책과 오버랩 되는 것이다. 진보적(좌파) 민족주의가 반미 자주의 대미정책과, 보수적(우파) 민족주의가 한미동맹의 대미정책과 한 쌍을 형성하고 있음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화기부터 일제시기를 거쳐 분단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온 외세개입과 의세 의존의 왜곡된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토양을 배양했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민족화해의 대북정책과 함께 자주적 대미관계를 지향하는 토대가 되었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적 단합과 화해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통일 민족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대등한 자주적 관계를 이루고 종속적 한미동맹이 해소됨으로써 저항 민족주의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 민족주의가 자주적 대미관계의 토양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우선시하고 공민적 근대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대미정책이 된다. 따라서 반미자

주나 외세배격의 저항 민족주의 대신 한미동맹이라는 국가동맹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이 다소간 예측성을 강화하고 자주성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풍요로운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동맹이라면 이는 근대화 입장의 민족주의에서 불가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된다.

대미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민족주의의 이중성은 존재하고 필요하다. 대미정책 역시 한국 민족주의의 이중적 존재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수용한다면 보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우호적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게 된다.

다만 민족주의의 양 측면을 고루 보지 못하고 한미동맹 철월에 집착하는 반미적 저항민족주의로 왜곡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 있음이 지적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보수적 민족주의 역시 한미동맹 지상주의와 한미동맹 올인론에 집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한미 간 대등한 관계마저 포기하게 되는 대미 예측과 종속을 우려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적 선호에 기초해서 주변국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개인과 집단의 진보, 보수의 이념적 성향은 특수한 한반도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바로 안보 문제 있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냉전 시기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안보와 경제 영역 모두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안보와 경제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 영역에서 실리를 추구하게 되고, 국제경제에서의 민간 영역이 더욱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겠다.

실례로 2010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주변국 인식 중 이념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 보수,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미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일수록 상대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 주변국에 대한 선호들을 보면 이념적 선호의 영향과는 실질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중도, 보수 모두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미국(25.2%)보다는 중국(43.16%)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대미인식은 진보(8.13%), 중도(10.1%), 보수(6.99%) 모두 비슷한 수치의 응답을 보였다.²¹⁾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관련 있으며, 중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이제 실효를 다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여전히 미국은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표 1> 안보·경제 영역별 국가별 선호도와 이념성향의 상호관계

		이념적 성향		
		진보	중도	보수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미국	221(24.42)	302(33.37)	267(29.5)
	중국	26(2.87)	42(4.64)	14(1.55)
	일본	5(0.55)	12(1.33)	8(0.88)
	러시아	1(0.11)	4(0.44)	3(0.33)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미국	71(8.13)	88(10.08)	61(6.99)
	중국	107(12.26)	137(15.69)	132(15.21)
	일본	50(5.73)	90(10.31)	70(8.02)
	러시아	20(2.29)	32(3.67)	15(1.72)

출처 : 이성우,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p. 117 재인용

21) 이성우,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7~118.

하지만 문제는 안보 영역에서의 자주성의 강조가 자칫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도외시하는 하나의 정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있어서 실사구시의 입장과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좌파) 민족주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한미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대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철폐나 반미자주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의 대북정책과 병행하는 한미관계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보수적(우파) 민족주의 역시 저항적 민족주의의 역사성과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민족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한미동맹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한미관계가 지나치게 예측적인 것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증진에 기여하는 대미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대등한 한미관계 그리고 민족화해가 공존하는 대미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본래적 이중성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대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저항민족주의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번영의 담보장치로서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 모두 공존가능하고 병행 가능해야 한다.

V.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 : 민족주의의 편향

그러나 탈냉전 이후 우리 현실은 민족주의가 한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보수적 민족주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압박에만 올인하고 흡수통일에만 집착하는 반민족적 세력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진보적 민족주의 역시 민족화해의 필요성을 넘어 자주적 통일담론에 간힘으로써

이른바 민족지상주의로 비판받을 만한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는 한국 민족주의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채우지 못함으로써, 좌파 민족주의는 근대성의 민족주의를 경시했고 우파 민족주의는 화해와 통일의 민족주의를 무시하고 만 것이다.

대미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민족주의는 한쪽으로만 편향되고 말았다. 보수적 민족주의는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마저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동맹의 예측화를 우려하는 저항 민족주의로부터 반미자주적인 세력으로 비판받아야 했다. 진보적 민족주의 역시 극단적 반미자주를 내세워 한미동맹 철폐와 전면적인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대성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대미정책에서도 우리의 진보와 보수는 민족주의의 양 측면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좌파 민족주의는 반미적 저항민족주의로 경도되었고 우파 민족주의는 한미동맹 지상주의로 왜곡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내용이 진보와 보수에 의해 편향적으로 극단화함으로써 탈냉전 이후 한반도는 매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제로섬의 상호 교환관계에 놓이게 되고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이 항상 엇박자를 내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안보 현안의 지속적인 대두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를 맞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 위협의 안보 이슈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기준으로 정부와 대북정책을 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공조를 모멘텀으로 하는 남북관계는 자기 작동의 논리와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보 현안의 부상에 따라 국제정치 역학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리고 안보 이슈의 부재 상황에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여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22) 전형권,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2003, p. 136.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안보부재’, 진보 진영에서 ‘민족-반민족’이라는 극단의 논리를 내세우며 상호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남남갈등은 점차적으로 침체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민족화해가 증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과는 반대로 항상 한미관계는 뼈거덕거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고 복원되었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제 반대로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의 파탄지경을 맞고 있다.

민족화해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한미관계 재조정과 대미 균형외교와 연결되었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한미관계는 소란스러웠다. 또한 강경기조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연결되었고 이 역시 한미관계가 탄탄해지는 만큼 남북관계는 퇴행을 겪어야만 했다.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는 대부분 양립하기 힘들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관계 발전이 병행하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 역시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는 우리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이자 현실이었다.

VI. 올바른 민족주의를 위하여 : 편향된 민족주의를 넘어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으로서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정치이념적 토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 투영되었던 ‘민족주의’의 내용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주의는 원래 서로 다른 두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다. 즉 민족에 대한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가 공존하고 또한 근대화의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와 근대화 이전부터

이미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는 애초부터 존재했고 또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를 전제로 한국의 민족주의 역시 오랜 시간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중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국민을 강조하는 측면과 민족을 강조하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공민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반영하여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와 발전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수적 민족주의가 강조하는 북한 근대화의 과제와 우호적 한미관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반영하여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동포애와 교류확대 그리고 민족통일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진보적 민족주의가 강조하는 민족화해의 중요성과 자주적 한미관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그러나 반미적 통일과 반미적 자주의 극단적 편향은 피해야 한다. 분단으로 왜곡된 민족주의는 통일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 근대 이후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받아왔던 민족주의 역시 자주성의 획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극복의 통일 민족주의

와 자주 지향의 저항 민족주의가 편향으로 흐르거나 진보만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민족화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이 확장되고 증대되는 통일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항 민족주의 역시 반미자주와 외세배격의 극단적 모습이 아니라 우호적 한미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성과 정치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반미 자주와 반미 통일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대등한 한미관계의 진보적 가치가 동시에 북한 근대화와 우호적 한미관계라는 보수적 가치와 공존하고 양립하고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엇박자를 교정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악순환을 단절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해법이다.

민족주의(nationalism)은 민족을 내세운 '민족주의'와 국민을 강조하는 '국민주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를 편의상 '민족적 민족주의'와 '국민적 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민족주의는 당연히 한민족으로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과 화해하며 더불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서 결국 민족을 단위로 하는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민족화해와 통일 민족주의의 대북정책인 것이다. 또한 민족적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화해협력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한미동맹과 한미 FTA가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예속을 우려하게 한다면 이를 반대해서라도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한다. 자주적 한미관계와 저항 민족주의의 대미정책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적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당성과 이를 전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지지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23) 그동안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성격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거나 일부 진보 진영에 의해 편향되게 독점됨으로써 마치 한국의 민족주의가 반미 자주와 연방적 통일만으로 비쳐진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적 정당성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 근대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다. 국민적 민족주의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을 북으로부터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을 보장받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과 유대를 더 강조한다. 우호적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대미정책인 셈이다.

민족적 민족주의와 국민적 민족주의라는 이중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는다면 사실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모두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대북정책은 민족화해와 동시에 북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미정책 역시 극단적 반미자주와 한미동맹 올인론을 넘어 대등한 한미관계와 우호적 한미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족화해에 기여하는 한미관계, 대북포용정책과 병행하는 한미동맹을 가능케 함으로써 진보와 보수가 상호 동의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구한말 이래 형성되어온 저항적 민족주의가 온전한 민족주의로 완성되고 동시에 분단으로 왜곡된 민족주의도 미국과 우호적인 통일달성으로 결국은 통일 민족주의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국민주의를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근대적 가치와 정당성을 배제하면서까지 친북적 민족화해와 반미적 자주화로 흐른다면 그것은 국수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국민주의가 민족화해를 거부하고 한미동맹과 북한흡수에만 집착한다면 그것 역시 반민족적 국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편향적 민족주의는 언제나 위험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국민주의와 국민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포괄하는 올바른 민족주의여야 하며 여기에 토대해서 균형 잡힌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통일 민족주의를 넘어 글로벌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완성하고 발전시키되 그것은 항상 동아시아와 함께하고 지구촌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²⁴⁾ 민족주의와 공존하는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²⁵⁾

민족주의는 선도 악도 아니며 사랑과 증오의 대상도 아니다. 순결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자 구체적 실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 역시 민족 단위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대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편향된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민족 지상주의에 빠지거나 과도한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의 합리적 진화를 통해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루고 민족화해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근대국가를 확장하며 결국 통일을 달성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완성을 기대해본다.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기여하고 세계화와 공존하면서도 여전히 존속하는 지혜로운 한국의 민족주의를 기대해본다.

24) 박세일 교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시민적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전자이고 국가 지상주의와 민족 지상주의로 전락하는 것이 후자라고 설명한다.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파주: 21세기북스, 2006, pp. 192~194.

25)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2002.

참고문헌

21세기민족주의포럼 엮음,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2011.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2004.

김동성, “민족과 통일의 미래,” 『전략연구』, 제14권 3호, 2007.

김동성, 『한국 민족주의 연구』, 서울: 오름, 1995.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2002.

김주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민족주의의 거세와 공세적 국가주의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78호, 2010.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파주: 21세기북스, 2006.

박현채 정창렬 편, 『한국 민족주의론 I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5.

송건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심양섭,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양승태, “플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최상용 엮음, 『민족주의, 평화, 증용』, 서울: 까치, 2007.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어네스트 겔너 지음, 최한우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서울: KUIS Press, 2009.

에릭 홉스봄 편저, 박지향 외 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이선민,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이성우,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이수훈 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1977.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 장문석,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2011.
- 전상숙,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반미’를 통해 본 이념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 『동양정치사상사』, 10권 1호, 2011.
- 전형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2003.
- 정일준, “지구시대 한미관계와 한국민족주의: 성찰적 민족주의를 위하여.” 『역사교육』, 제29권, 2005.
- 차기백,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ABSTRAC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Nationalism

Kim, Geun-Sik (Kyungnam University)

In terms of nationalism in Korea, It is based on Korean people's emotion and sentiment. In the mean time, we also required complete nationalism as the driving force and foundation for political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build a modernized nation state. In particular, as the modernization process was distorted, delayed and fractured due to foreign pillage and intervention. Korean nationalism added to it the additional characteristics of resistant nationalism and reunification nationalism combined and came to have an even more stable ideological identity. In this 21st century, Korea's nationalism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its international strategies should include political content and reflect Korean nationalism's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n a balanced way. First, Korean nationalism should reflect civic nationalism and ethnic nationalism at the same time and achieve them simultaneously as well. Second, Korean nationalism should reflect and achieve the characteristics of reunification nationalism and resistant nationalism. Therefore, Korea's international strategies based on nationalism should not be the radical insistence of anti-American autonomy or anti-American reunification but the progressive value of national reconciliation. The equivalent Korean-American relationship should coexist with, be compatible with, and accompanied by the conservative value of North Korean modernization and favorabl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This is a very expedient solution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olicy toward the U.S., stop the vicious cycle of North and South Korea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and resolve unnecessary South-South conflict.

Keywords : Nationalism, South-South Conflict, Inter-Korean Relation,

ROK-US Relation

투고일: 2013년 06월 03일, 심사일: 2013년 07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4일